

## 일반논문

#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들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위하여

Alternatives to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towards dealienated 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s

최병두\*

이 논문은 창조경제창조도시 담론의 의의와 한계 또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주창자들의 제안과 비판적 연구자들의 대안들을 논의한 후, 창조성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이나 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에 함의된 규범적 측면, 즉 인간 창조성에 대한 관심, 이를 함양하기 위한 창조도시의 조건들, 그리고 창조성의 함양과 창조도시의 조성을 창조경제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창조도시 이론이나 정책은 사회공간적 불균등과 양극화, 도시 주거 및 환경문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유발한다. 플로리다는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성을 강조하는 자기모순적 해법을 제시했다. 다른 많은 비판적 연구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으며, 이들은 대안적 사회경제론, 도시환경론, 공공정치론 그리고 사회주의적 지방정부론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의 한계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성을 노동에 의한 생산과정에서 실현되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자본주의적 노동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상실 또는 왜곡된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탈소외화와 일상생활의 재창조적 축제화를 제시한다.

\*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주요어: 창조경제, 창조도시, 대안적 창조성, 탈소외된 노동, 재창조적 축제

## 1. 서론

탈산업화된 현대 도시에서 경제적 생산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사물들뿐만 아니라 형식화된 기술과 정보, 문화와 예술 등 상징적 수단들도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생산·순환된다. 심지어 인간의 지식이나 창조성까지도 지식기반경제 또는 창조경제라는 이름 하에서 상품화되고 있다. 반면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기실현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은 소멸되어 가거나 또는 왜곡되고 있다.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으로 촉진된 기계화·자동화 생산과정은 인간 노동을 탈숙련화시키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신경제를 주도하는 첨단기술산업, 문화예술산업 등은 인간의 창의적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창조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에 관한 이론으로 제시되었고,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창조경제 이론은 기업이나 산업 그 자체보다도 인간의 창조성 또는 창조적 인재의 육성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며, 창조도시 이론은 이러한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도시 조건들, 예로 개방성, 다양성, 관용성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국가 및 지역들에서 정책적으로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많은 논평가들뿐 아니라 이론의 주창자들도 개념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개념적 측면에서 이 이론은 창조성을 어떤 국가나 도

시의 경쟁력 우위를 위한 근원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판된다. 또한 창조경제·창조도시는 불균등지역발전과 양극화, 스트레스와 불안감 증가, 난개발(스프롤)과 생태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이 이론의 주창자들 중 한 사람인 플로리다도 인식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제시된 대안적 개념들은 사회적 자본, 공유경제, 사회적 공공성, 민주성 또는 인권도시, 생태문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다양하다. 그 외에도 이 이론에 대한 대안적 연구들은 창조성에 대한 개념적 재구성이나 소도시 또는 교외나 농촌지역에서 작동하는 창조성 또는 일상생활이나 토속적 삶 속에서 드러나는 창조성 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안적 개념들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서 강조되는 인간 창조성의 가치와 이에 바탕을 둔 경제나 이를 함양하기 위한 도시의 발전 전망 그 자체는 부정될 수 없다. 또한 대안적 개념들도 인간 창조성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공간적 조건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들도 창조성의 발현이 왜곡되는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이 논문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 논평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주창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또한 기존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개념이나 방안들에 관해 논의한 후, 새로운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위해 바탕이 된 사고는 마르크스와 르페브르의 이론으로, 특히 인간 창조성의 실현을 위한 노동의 조건, 즉 노동의 '탈소외화'와 이를 함양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창조적 축제화'의

개념이 강조된다.

## 2.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의 의의/한계와 부정적 효과

### 1) 창조경제·창조도시의 의의와 한계

2000년대 초에 시작된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1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바탕을 둔 정책들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 도시들에서 벤치마킹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이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이 이론이나 정책이 그만큼(최소한 외형적으로) 강력한 매력이나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UNCTAD 창조경제보고서』(2010)에 의하면, “창조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요구해 온 정책 대응이었고, 국제 경제와 개발 아젠다의 이슈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창조경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호응을 얻게 된 이유는 “적절히 육성된 창조성은 사회 통합, 문화적 다양성,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면서 문화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며, “또한 인간 중심의 개발에 영향을 끼치고 일자리 창출, 혁신, 무역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 이론과 정책이 가지는 의의는 우선 ‘창조성’이 인간 중심의 개발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이 보고서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수요 하락 및 무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해당된다. 즉 창조산업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잠재력을 가지며, 이 유형의 국가들이 창조상품의 세계적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며, 2002~2008년 사이 연 13.5%

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창조산업의 부문별 수출 통계에서 기능적 창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78.8%에 달한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다소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능적 창조부문이란 창조산업에서 유산, 예술, 미디어를 제외한 부문들로 R&D, 소프트웨어 등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사실 선진국들이 국제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정보통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UNCTAD 보고서를 포함해 많은 정책보고서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저서들이 창조경제나 창조도시를 강조하며 또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이론이나 정책이 탈산업사회로 전환한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 및 도시개발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에 조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조경제 담론은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위한 기술혁신의 조건 제시에 부응한다. 이 점은 플로리다(Florida, 2005; 이원호 외 역, 2008) 자신이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미국적 모형이 “시대 전체를 개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엘리트주의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가지는 한계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그는 자신의 이론이 ‘혁신과정에서 창조적인 사람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혁신론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미국적 혁신모형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즉 플로리다의 이론은 창조성 그 자체의 의의보다는 창조계급의 역할과 사회경제적 우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창조경제·창조도시론 역시 지역혁신 과정 나아가 포괄적인 ‘신경제’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엘리트주의적 대응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창조도시에 관한 플로리다의 사고는 창조성의 함양 또는 창조적 인재의 유치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창조경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반면, 랜드리와 사사키의 창조도시이론은 다소 다른 맥락에서 유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즉 이들은 창조도시가 새로운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보다, 기

존의 도시들이 봉착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조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랜드리(Landry, 2001; 임상호 역, 2005)의 논의는 도시의 새로운 경제성장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우선 관심을 두며, 이에 따라 예로 도시의 교육체계,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한다. 사사키(佐佐木雅幸, 2001; 정원창 역, 2004) 역시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지적 지역 문제의 창조적 해결을 위한 장으로서 창조도시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랜드리와 사사키의 창조도시론은 결국 창조성과 기술 혁신, 문화와 예술 등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재생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 사사키의 논의 역시 창조도시를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과 더불어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정의함으로써 도시의 경제 재활성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창조성 또는 창조인재의 육성을 통한 지역 혁신이나 도시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결국 창조계급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지역 경제성장 또는 도시 재생 전략으로 동원되거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이 안고 있는 이러한 이중성은 부분적으로 이 이론 주창자의 양면성 또는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펙(Peck, 2005: 741)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플로리다의 주장들은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 즉 “세계시민적 엘리트주의와 대중적 보편주의, 향락성과 책임성, 문화적 급진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우연적 추론과 인과적 추론, 사회적 자유주의와 비즈니스 현실주의”를 혼합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경제·창조도시에 대한 비판적 연구자들은 이에 관한 모호한 사고가 과거 신자유주의적 도시 전략의 새로운 구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Pratt, 2011), 펙(2005)은 창조성 담론이 정치적으로 애매한 주장들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단순화시킬 수는 없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선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이 가지는 몇 가지

유의성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인간의 창조성에 가장 우선된 관심을 둔다. 플로리다에 의하면, 어떠한 물질적 생산요소들보다 “인간의 창조성이 경제성장의 근본 원천”으로 간주된다. 그는 이러한 창조성이 모든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이라고 강조한다.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창조적이며 모두가 창조계급의 잠재적 구성원들”이라고 주장된다(이원호 외 역, 2008: 38, 54). 랜드리 역시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사람’, 즉 “인간의 지혜, 욕망, 동기, 상상력, 창의성”이라고 지적한다(임상오 역, 2005: x). 그러나 플로리다가 인지한 바와 같이, 문제는 “전체 노동력의 30%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일에서 창조성을 활용하는 대가”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이들은 인간의 내재적인 창조성이 자본주의 경제와 도시에서 왜 제한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이러한 창조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조건으로서, 개방성, 다양성, 관용성 등을 강조한다. “창조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관용적이고, 다양성을 지니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원호 외 역, 2008: 38). 이에 따라 플로리다는 예로 게이수도로 대표되는 다양성 또는 개방성을 창조도시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한다. 그의 이론은 처음에는 이와 같이 게이, 보헤미안, 외국인 이주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한다는 점, 즉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관용을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플로리다는 창조도시의 조건으로 이러한 다양성, 개방성, 관용성 등을 강조하지만 또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인재 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창조도시에 관한 랜드리의 견해는 플로리다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가 제시한 창조도시의 전제조건들(즉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인간의 존재와 혼합, 지역문화, 지역 정체성, 도시의 공간과 시설, 네트워킹과 연대구조)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열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창조적 인재의 유치 또는 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창조적 도시 또는 장소의 조성을 창조적 기업이나 산업의 유치보다 우선시한다. 즉 이 이론에 의하면, "보다 중요한 사실은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재들이 집중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기업들이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장소가 경제적 삶에 필수적"이다. 즉 경제는 실제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집중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이원호 외 역, 2008: 6~7 및 45). 랜드리 역시 삶의 질은 장소에 대한 애착 또는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장소에 대한 애착은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인간의 근본욕구"이며, 사람들은 "장소만들기에 열중할 때 그 가치가 증가된다"(임상오 역, 2005: 49 참조). 요컨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인간의 창조성을 가장 근본에 두고, 창조성을 함양할 수 있는 창조적 도시나 장소의 조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창조산업이나 창조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이 이론은 창조경제나 창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창조도시를 목적 실현의 장으로, 창조적 인재를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 즉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오늘날 도시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술산업이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창조성을 가진 인재의 유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성과 개방성의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창조경제·창조도시의 부정적 효과와 자기모순적 해법

창조경제나 창조도시를 주창하고 이를 정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정치가들은 창조도시를 통한 인재 유치와 더불어 자본의 투입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따라 창조산업 또는 창조경제의 생산성과 무역의 규모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한다. 이들은 첨단 기술산업의 발달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나 문화적 콘텐츠 개

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창조성에 주목한다. 또한 이들은 영화나 미디어, 미술품이나 음악 등과 같은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대규모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창조도시의 발달은 국제 금융자본의 폭발적 성장과도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첨단기술산업이나 문화산업은 다른 분야들에 비해 위험성은 높지만, 투기적인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휴자본이 몰린다. 오늘날 창조도시라고 불리는 세계적 도시들, 예로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도시들은 국제금융의 허브이다. 창조경제·창조도시 연구자나 정치가들은 이러한 점을 자신들의 이론이나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내세운다(한세익, 201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이나 문화예술산업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산업들은 도시의 재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칭송되고 있지만, 이 분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생산 현실은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지속적인 취업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등이 만연해 있다(Vivant, 2013; 최병두, 2013). 물론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자본가들이나 고기능 인력들은 독점적 초과이윤이나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창조도시는 이러한 고기능 인력들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사회공간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정부(중앙 및 지방) 정책은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특혜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의 전략이나 정부 정책이 실제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일부 창조도시들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겠지만, 세계 경제나 선진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매우 저조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저성장 경제 구조로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창조경제·창조도시 이론이나 전략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문의 사례로, Pratt(2008)는 플로리다가 주장하는 창조계급과 도시 성장 간의 관련성을 비판하고, 문화산업을 오히려 생산과 소비, 제

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하는 부문으로 이해할 경우 더 성공적인 (도시) 재생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Krätke(2010)는 “플로리다의 개념이 빈곤하거나 쇠퇴한 지역을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의 진로로 이끄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지만, 독일의 경험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살펴보면 “플로리다가 제시한 창조적 전문가(또는 그가 ‘달러 계급’이라고 지칭한 집단)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발전을 위한 도시 지역들의 성공에 유의한 또는 긍정적 영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창조성(또는 창조계급)과 도시의 경제발전이나 재생의 성공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되는 비판은 창조경제·창조도시 이론이나 정책이 결국 자유시장과 상품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또는 기업주의적 도시를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창조경제·창조도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예로, 한상진(2008)은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이 재정 지원 경쟁이나 개발계획과 같은 단기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실용주의 노선에 치우쳐 있고, 지역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빈곤 경감,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사하게, 이용숙최정인(2012)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이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창조적 계급 혹은 인재들의 상상을 초월한 연봉과 고급스러운 문화생활을 정당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들은 “창조도시 내의 빈곤, 사회적 배제 계층의 소외,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들은 창조경제로 진전됨에 따라 더욱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내 연구자들 외에도 국외의 많은 연구자들도 부정적 효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Boren and Young, 2012 등 참조).

플로리다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 창조경제·창조도시의 부정적 외부성을 상당 정도 인정하게 되었다. 즉 플로리다는 “창조경제

&lt; 표 1 &gt; 창조경제, 창조도시의 부정적 외부성

측면	주요 내용
경제	불균등 지역발전: 창조경제는 특정 지역 선호,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불균등 발전 초래
정치	정치적 양극화: 창조경제는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초래, 경제적 지위, 문화적 견해,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의 심화
사회	주택문제: 창조경제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도시에 근간을 뒀. 높은 주택가격은 예술가와 창조적 인재의 지역 이탈 유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화	스트레스와 불안감 증가: 창조경제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 구조를 소멸시켜 개인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직접 가중.
환경	스프롤(sprawl)과 생태파괴: 창조경제의 성공은 안정적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발 압력을 증대, 지역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자료: 이원호 외 역, 2008: 220~221에서 정리.

는 매우 혁신적이고 부를 창조하며 생산적인 미래를 창출하지만, 역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부정적 외부성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로, 특히 "이러한 불평등이 선도적인 창조적 지역에서 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원호 외, 2008: 219). 그 외에도, 그가 인정한 바에 의하면(<표 1>), 창조경제는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부유한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예술가와 창조적 인재들의 이탈을 초래한다.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는 창조도시는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며, 자연환경과 어메니티가 첨단기술도시에 창조적 인재를 유입시키는 성공요인이지만, 이는 다시 인재의 이탈을 유발하는 모순을 가진다. 그리고 창조성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과 계층을 막론하고, 개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진다. 경제적 지위, 문화적 양식,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사람들이 분리되는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 경향이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창조적 인재들을 유인했던, 다양성, 개방성, 어메니티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한때 성공했던 도시는 다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점은 결국, 창조적 인재

의 유입과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자체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자인하게 된다. 플로리다는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창조적 산업을 배양하고 더 창조적인 사람을 창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서술하고 "창조경제와 창조사회의 발전은 소득 불평등, 주택부족, 불균등발전, 인간 잠재력 미개발 등과 같은 문제들을 지역과 국가가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원호 외 역, 2008: 223). 그러나 플로리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지 창조경제나 창조도시의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산업사회와 케인스주의에 대한 역사적 유추에 바탕을 두고<sup>1)</sup> 창조성이나 창조도시를 함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부정적 외부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조성을 배양할 수 있는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플로리다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낯은 유형의 작업장을 '창조적 작업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이길태 역, 2011: 227~236).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는 자신의 가정부를 사례로 든다. 즉 가정부가 창조적 재능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가사 청소에서 나아가 집안을 장식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도시 불균등이 더 창조적인 계급의 리더십을 통해 가장 잘 해소될 수 있다는 플로리다의 믿음을 예시한 것이다. 플로리다는 또한 불균등을 줄이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견해도 분명히 한다. 예로, 그는 노동조합 결성, 최소 임금 인상, 생계 임금 운동의 확대 등을 '진부한' 해법으

1) 플로리다(이원호 외 역, 2008: 223~224)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대량생산 산업이 등장하면서 놀랄만한 혁신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 생산성 향상과 부의 창출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보수는 매우 불균등하게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었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비참한 조건 속에서 장시간 일했으며, 도시는 오물과 매연, 폐수로 가득하고 공중보건 상태는 열악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산업사회의 발전이 요구되었고, 대공황과 뉴딜 시기를 거치면서 도입된 케인스주의 방식이 계급투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로 간주하고, 이러한 해법들을 '창조성-차단'(creativity-stifling) 전략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그에 의하면, 이런 방법들은 비창조적 작업 범주들을 보 전함으로써 창조적 계급에 대한 비창조적 계급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Donegan and Lowe, 2008: 47).

이와 같이 플로리다에 의하면,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창조성의 함양과 이를 위한 창조계급의 역할(리더십)이 강조되는 한편, 과거 산업사회의 노동운동이나 노동조직의 강화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은 개인적(또는 행동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플로리다의 기본 전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 부정적 외부성, 예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국가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 또는 인도나 중국과 같은 신흥대국도 아니며,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플로리다는 그 이유로 "이 나라들이 경제발전의 세 가지 T(기술, 인재, 관용)의 점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사회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개방적 사고와 관용의 가치, 그리고 혁신과 창조성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조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긴장과 외부성에 대응하고 그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원호 외 역, 2008: 22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안적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모순적 해법이다. 창조경제·창조도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창조도시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마치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창조성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창조도시의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창조성을 더욱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간과하거나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창조경제·창조도시에 대한 대안들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이 기대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면 이로 인한 여러 부정적 효과들이 우려되고 있다. 플로리다는 창조계급 또는 창조경제가 이러한 부정적 효과들을 유발하지만 또한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계급의 성장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불균등 문제 등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도시나 지역이 저임금 서비스분야의 피고용자들의 소득 능력과 개선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그 답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Donegan and Lowe, 2008: 58).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창조계급의 관용과 배려, 리더십에만 의존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 점은 플로리다가 인정하는 것처럼 창조성이 더 큰 도시들에서 불평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플로리다는 문제의 발생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행위적 차원의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Atkinson and Easthope, 2009). 이러한 점에서 창조경제·창조도시론 내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 대해 비판적 연구자들은 문제의 지적과 더불어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창조경제 또는 창조도시론과 관련된 대안들은 사회적 자본론, 공유경제론, 인권도시론, 생태문화도시론, 사회공공성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론, 정감적 공동체론, 지속가능한 도시론, 문화운동 또는 도시사회운동론, 포용적 민주화론, 사회주의적 지방정부론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주장에서부터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대안에 내포된 함의에 따라 대체로 4가지 유형, 즉 대안적 사회경제론, 대안적 도시환경론, 대안적 공공정치론, 대안적 지방정부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lt; 표 2 &gt;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 대한 대안들

유형	주요 개념
대안적 사회경제론	사회적 자본, 공유경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도시환경론	인권도시, 생태문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대안적 공공정치론	사회적 공공성, 자치 공동체, 포용적 민주화, 문화(도시사회)운동
대안적 지방정부론	사회주의적 (탈신자유주의적) 지방정부

2>). 이러한 대안들은 국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내용도 포함하며,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일부 중첩되기도 한다.

### 1) 대안적 사회경제론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 대해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가지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한상진(2008)은 사회경제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창조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플로리다의 이론을 성장도시 중심의 선순환 논리,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경시, 경제에 대한 일면적 관점 등을 비판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모델에 입각한 창조도시의 대안은 사회적 자본을 기축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생태를 통합시킴으로써 특히 낙후 도시, 중소도시의 창조환경 조성을 통한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사회적 자본은 플로리다가 제시하는 고급문화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지적 수용성, 정치적 개방성, 협력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창조성과 호혜성의 토대로 작용한다고 주장된다.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은 사회적 자본의 강한 유대보다 창조적 자본의 약한 유대가 바람직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한상진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신뢰와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이 도시 창조성의 원천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사회적 경제란 한상진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호혜, 자조 등의 사회적 목적을 경제 활동에 연계시키는 개념이다. 협동조합 등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할수록 시장 경제에 대한 부차적 또는 보완적 위치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지구화에 따라 시장경제의 폐해가 가중됨에 따라 재화보다는 생존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회경제의 의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호(2013)는 '창조경제 시대의 협동조합'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시장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성격을 갖는 기업"이지만,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민주적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된다. 특히 이러한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원가경영과 조합원의 공동행동, 그리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기인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러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해서 이윤을 얻지만, 그 활동의 동기는 개인적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일자리 해소와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재구(2014)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창조경제의 프론티어'라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사회적 창조경제'란 "자발성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공적 경제행위 일체"를 의미하며, 이의 주요 특징으로 목표로서 이윤보다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이익 우선, 정부 의존보다 독립적 운영 추구, 민주적 의사결정, 소득분배에 있어 자본보다 인간과 노동을 우선 고려한 소득분배 등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는 협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다.

사회경제론은 폴라니가 주장하는 호혜적 인간과 시장의 개념에 바탕을 둔 공유경제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손대권(2012)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진화를 통해 존립,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가 '경제적 인간'뿐만 아니라 '호혜적 인간'까지 시장에 편입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는 "사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타적 행위자들을 시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 많은 인구가 시장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될 때,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상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사회경제론에 바탕을 둔 대안들은 한상진(2008: 185)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조계급을 유인하는 도시"나 '용어만 바꾼 문화 도시 전략을 뛰어 넘어 생활방식이라는 의미의 문화와 호혜적 경제를 융합시키는 대안적 창조 도시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자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등의 경제는 분명 단지 창조경제. 창조도시론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적 모색에서도 흔히 거론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가지는 대안적 함의들은 결코 무시될 수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플로리다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만, 다른 주창자들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겠다. 플로리다가 이 개념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성장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소속감과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반면, 그만큼 새로운 참여자를 막고 진입장벽을 세우며 혁신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이원호 외 역, 2008: 48).<sup>2)</sup> 그러나 창조성이 개인적 능력이라기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는 점은 랜드리나 사사키의 창조도시론에 주

2) 또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에 속하는 집단의 면담조사에 바탕을 두고, 이들은 공동체적 연계를 거의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한다는 부각시키고 있다(이원호 외, 2008: 48). 그러나 플로리다는 다른 저서(이길태 역, 2011: 488~489)에서 사회적 자본은 부정하지만 사회적 결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푸트남과 그의 많은 추종자들이 옹호하는 강한 사회적 자본 공동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 우리는 분열되고 모순된 사회에서 탄탄한 창조경제를 유지하기를 바랄 수 없다. ... 다양하고 개방적인 공동체는 창조성을 자극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부와 경제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경쟁력 우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요하게 함의되어 있다. 예로, 랜드리(임상오 역, 2005: 19)는 창조성이 인간적 의사소통, 경청하기, 팀의 구축이나 협상과 중재하거나 네트워킹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환경을 확립하는 것(즉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창조도시의 도전적 역할로 간주된다. 사사키에 의하면, 볼로냐(Bologna)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유지하고 고양할 수 있는 참여와 연계활동 때문에 창조도시의 모형으로 제시된다.

UNCTAD(2010)의 보고서 역시 창조적 협력 또는 '협업 속의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창의성이란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문화 창출과 활용의 집단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중요성을 인정한다. 공유경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 역시 이미 이 보고서에서 거론되고 포섭되고 있다. 즉 이 보고서는 "도시의 이미지, 언어, 예술, 운동 등 문화공유재는 ... 인류의 무형 유산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이며 "끊임없이 변화[진화]를 거듭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 문화에 대항하는 사람들, 특히 금전적 풍요를 좇는 이들에게 문화 공유재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경제나 사회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원이라는 점이 강조된다(UNCTAD, 2010: 23).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나 공유경제의 개념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서도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사회경제의 주요한 활동 주체로서 부각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규정력이나 특히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의도를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분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 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나눔 경영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태수(2009: 25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한국적 현실에서는 오히려 관료화되거나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모형으로 귀착되는 데에 기여할 우

려"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나 협동조합의 뿌리가 취약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시장 주도적 모형을 지향할 가능성이 태생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 2) 대안적 도시환경론

창조도시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연구자들은 '창조도시'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이 개념이 가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시 시민들, 특히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도시'를 제안한다. 예로 정성훈(2012)은 창조도시의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에는 세계사회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 개념들은 토건중심 도시계획에 맞서는 진보적 힘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도시 개념은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시 개념으로 '인권도시'를 제안하며, 이 제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안적 도시 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또한 김기곤, 2011 참조). 인권도시 또는 인간도시, 인문도시 등의 개념은 창조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권도시의 개념은 기존의 인권운동이나 주거권운동, 빈민운동 그리고 최근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심광현(2012: 44)은 이러한 인권도시의 개념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다소 공허"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정성훈(2012)은 창조도시론과 문화도시론과 같이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에 함축되어 있는 시대인식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권도시와 같은 인문적 비판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심광현(2012)은 이와 같이 인권도시의 개념

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생태도시'의 개념이 도시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창의적 잠재력을 활성화하려는 동기 부여의 측면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태문화도시'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이 개념이 "공간의 생태적 조성만이 아니라 그 공간적 조성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주체인 시민들의 문화적 주체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진전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 모형이 "고밀도 도시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도시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존의 산업도시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처하기 위한 시도는 심광현이 제시하는 '생태문화도시'라는 개념뿐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창조 도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에 의해 보완되거나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예로, 조성철·임업(2009)은 창조도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회공간적 분리현상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창조도시를 새롭게 조명하고 총체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혜민(2011)은 도시 내 쇠퇴주거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창조적 도시재생 정책을 적용하고자 한다.

창조도시론에 대한 이러한 대안적 도시론들은 사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많은 대안적 도시론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김용창(2011)은 근대주의 도시발전 모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으로 등장한 다양한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광역거대도시, 세계도시, 네트워크도시, 창조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생태도시, 건강도시, 슬로시티, 스마트성장, 지방의제21, 뉴어버니즘, 어반빌리지, 콤팩트시티, 마치츠쿠리 등을 제시하고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도시모형들의 한계를 극복 또는 보완하기 위해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송은하(2012)는 다양한 대안도시 모형들을

열거하고 각 모형들에 따른 도시 평가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결국 창조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또는 어떠한 도시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 인권도시의 개념은 사실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르페브르나 하비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다른 어떤 도시 모형들에 비해 급진적인 주장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한 송은하(201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인권도시 추진의 모범사례인 광주에서조차 인권도시의 기본 정신과 가치에 대해 시민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관련정책들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인권도시라는 외형적인 도시 육성보다는 실제 인권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생태문화도시의 개념이나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 역시 많은 한계를 가진다. 사실 정성훈(2012: 400)은 인권도시를 제안하면서, "생태도시 개념도 분명 중요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지만, 창조도시와 문화도시 개념에는 이미 환경과괴적인 토건 중심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기존의 창조도시 개념은 문화도시의 개념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생태도시의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다면, 심광현(2012)이 제시한 '생태문화도시'란 창조도시의 대안이라기보다 단순한 절충에 불과하게 된다. 사실 랜드리의 창조도시 개념은 창조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랜드리(임상오 역, 2005: 88; 번역 일부 수정)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우리 시대의 핵심 개념이다. 이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며, ... 도시 발전에 관한 우리의 개념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환경론을 넘어서 심리학, 경제학, 문화(학)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할 더욱 풍부한 개념이다. 이는 새로운 사고와 융합하며, 창의성의 지속가능한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창조도시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을 포섭하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도시 담론 간 개념적 결합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랜드리의 창조도시 개념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은 분명 결합가능하며, 단지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로, 랜드리가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소득 흐름을 유지할 필요를 뒷받침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양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임상오 역, 2005: 89).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가지는 한계는 이러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균형 있게 시행되지 않으며, 실제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적 도시론이 가지는 또 다른 한계는 장소 또는 공간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태도시, 문화도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공간환경과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권 도시의 개념 역시 공간적 차원과 내재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3)</sup>. 플로리다, 랜드리 등 창조경제·창조도시 주창자들은 대부분 도시의 장소성이나 공간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예로 플로리다(이원호 역, 2008: 18)에 의하면, "장소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게 하고, 서로 다른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창조적 에너지를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도록 한다. 랜드리(임상오 역, 2005: 9) 역시 "문화는 어떤 장소가 고유하고 특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련의 자원"이며, 이러한 장소-특정적 문화가 창조성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의 모색에서, 창조성 자체는 여전히 유의한 개념이라면, 이와 관련된 장소의 개념 역시 중요하게 부

3) 예로 김기곤(2010: 49)은 "공간은 사람과 사물들을 위치시키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인권정치에 대한 공간적 인식 전환"을 통해 다양한 실천적 의미를 얻고자 한다.

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의 모색에서 국내 연구자들은 도시의 규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물론 도시의 물리적 크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창조도시 개념은 분명 대도시 중심의 특정 지역을 창조성의 장소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내 또는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창조도시론에 대한 대안들은 중소도시, 교외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창조성이 함양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들은 도시 내 재활성화된 특정 지구나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장소들이나 창조적 소도시, 또는 시골이나 교외의 주변적, 지방적 장소들에 관심을 두기도 한다(예로 Waitt, 2009; Bain, 2013 등 참조). 특히 플로리다의 창조계급 논제에 대한 비판으로 창조성에 대한 재개념화와 이의 장소성을 강조하기 위해 '토속적 창조성'(vernacular creativity)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 (Edensor, 2010).

### 3) 대안적 공공정치론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 이론이 정치적 측면, 즉 경제체제나 도시공간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이론에 대한 대안들 가운데 일부는 도시의 공공성이나 정치적 참여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예로 한세익(2011: 384)에 의하면, 도시는 공공성을 지녀야 하지만, "한국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권력과 재력가들이 독차지해 온 영역"이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문제의 해결이나 도시 가치의 창출을 위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익보호나 복지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공공의 개입 노력은 도시정부나 중앙정부와 이들의 정치를 주축으로 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창조도시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세억(2011)은 사사키(정원창 역, 2004)를 인용하면서 "창조도시의 요건으로서 산업 및 환경정책과 연계된 창조도시 정책을 공공행정의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공공성 강화는 분명 창조도시 담론이 가지는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창조도시론(특히 플로리다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지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공성의 의미와 이를 배양하기 위한 도시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예로 Krueger and Buckingham(2012)는 지속가능성과 창조성을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적으로 좀더 '포용적인' 창조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랜드리의 창조도시론에 공감하면서, 창조도시를 위해 절적하게 입안된 계획과정과 시민 참여 그리고 정치개혁을 통해 만들어지는 창조적 기회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도시의 공공성이나 창조성은 관료주의적 정부의 개입에 의해 보장되기보다는 도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한세억(2011)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창조도시 담론은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에 기인"한다는 점, 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도시로 체화하기 위해 시민의 창의성을 도시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함에 따라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 대한 대안은 기존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욕구와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정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사사키의 '내발적 창조도시'론에서 강조되는 점이다. 즉 외부로부터 창조적 인력의 수급이나 대규모 창조산업에 의존하는 대신,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문화적 자산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내부로부터 변혁을 통해 창조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은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과는 대조된다. 또한 사사키는 도시들이 과거의 중앙집

권적이고 획일적 도시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권을 강화해, 환경, 문화, 복지,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창조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내발적 발전을 통해 창조도시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공정치적 측면에서, 창조도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아나키스트적인 히피(또는 보헤미안)공동체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Vanolo (2012)는 코펜하겐 중심부 내에 위치한 인구 천 명 정도의 자치공동체를 고찰한다. 이곳은 1970년대 히피공동체를 위한 점유지가 된 이후, 오늘날에는 대안적 사회활동이나 아나키즘의 중심적 연계지(결절)의 성격을 가진다. 이곳은 활기찬 혁신 분위기, 예술, 실험적 사고, 독창적 건축 등을 함양함으로써 '창조적 코펜하겐'의 사고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창조적 잠재력의 많은 부분은 장소-특정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즉 창조성이란 유동적이면서도 또한 상황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히피공동체는 플로리다가 주장하는 보헤미안적 생활양식의 역할과 연계된다. 19세기 부르주아적 사회에서 주변화되었던 예술가 및 지식인들의 보헤미안적 하위 문화는 플로리다에 의해 미국에서 새로운 창조계급의 등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즉 "과거 사회적 주변화의 상징이었던 보헤미안적 생활스타일은 이제 창조경제, 문화경제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의 징표가 되었다. 19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예술적 비판은 이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으로 간주"되고 있다(Roberts, 2012).

창조도시의 대안에 관한 공공정치적 이해는 이를 위한 단순한 시민 참여에서 나아가 시민중심의 실천적 운동을 요청한다. 예로, Novy and Colomb(2013)은 자본주의 도시발전 과정에 의해 문화와 '창조성'이 도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문화 생산자들의 실천 운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희망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에서 문화 생산자들의 잠재적 역할에 관한 하비의 관점, 특히 '(창조적)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발생했던 도시 저항운동을 고찰하고 있다. Vivant(2013) 역시 플로리다의 개념으로 창조

계급에 속하는 문화생산자들이 특정한 도시공간을 지키고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시사회운동의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다른 많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창조적 전문직들은 노동과 생활의 불안정한 조건들에 봉착해, 도시 계획이나 정책이 자신들의 요구와 제약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창조성의 함양을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내발적 발전론에서부터 아나키즘의 성격을 가진 자치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대안들에 더해 실천적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들은 흔히 대안적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실천적 함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Vivant(2013) 등이 서술한 바와 같이 대안적 도시시민운동은 창조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전망과 이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실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창조도시 이론이 가지는 규범성이 있다면, 이는 오늘날 도시들이 전례 없이 창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도시들은 또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만연한 장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배나 고용기회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은 도시 정책의 기본 과제이다. 그러나 또한 공공성, 시민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등의 기본 이슈들을 도시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Scott(2006: 1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들은 그 자체로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창조적 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4) 대안적 지방정부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또는 시민사회운동을 전제로 새로운 대안적 지

방정부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안적 지방정부론은 단순히 창조도시를 위한 정부(도시 또는 중앙정부)의 개입과는 달리 아주 다른 분위기에서 매우 대조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안은 Peck(2011)이 제시한 1980년대 초 영국의 일부 사회주의적 지방자치의회(municipal socialist councils)에 의해 추진되었던 정책 모형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형은 오늘날 창조도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광역런던의회에서 맹아적 단계에서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사회주의적 지방자치의회는 (신)우파뿐만 아니라 (관료화된) 정통적 좌파에 대해서도 대립적 태도를 보이면서 독특한 도시정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과거 사회주의적 지방자치가 진보적 정치 목적을 위해 (결국 좌절되긴 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 역량을 구축하고자 했다면, 오늘날 창조도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를 어설프게 정당화하면서 지방정부의 통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퇴락시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Peck, 2011: 44).

이러한 사회주의적 지방자치는 셰필드, 웨스트 미들랜드, 그리고 광역런던의회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추진된 전략으로, 이를 추진한 활동가와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는 '신도시좌파'로 불렸다. 이들은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노동당 내 조합주의적, 관료주의적, 개량주의적 요소들(특히 영국 노동당의 후기 케인스주의적 개량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가졌으며, 지방정부를 자신들의 정치적 동원과 실험을 위한 대안적 장소로 설정하고 사회주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지방정부는 지방경제 자체의 물질적 전환을 추진할 수는 없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적 도전과 참여의 새로운 실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예로, 광역런던의회는 단일 거대 마스터 플랜을 피하고 여러 영역들에서 일련의 전략적 개입을 추진했다. 기존의 경제부문들(의류, 정밀기계, 정보기술 등)뿐만 아니라 매우 새로운 부문들(예로, 가사 및 돌봄 경제, 문화산업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맞춤형 전략들이 개발되었다.

문화산업의 경우, 문화부문 고용이 런던 노동시장의 유의한 분야라는 점에서 문화상품과 가치사슬, 문화산업의 독점성과 위험 구조, 문화 일자리의 시장 통합 정도, 새로운 기술의 영향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은 '창조자'로 지칭되는 특정 예술가 중심적 전략에 반대해서 다양한 세속적, 대중적, 노동계급적 문화에 접근과 인식을 넓히기 위해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민주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급진적 문화경제정책은 문화와 경제의 재정치화를 포함했다. 즉 사회주의적 지방정부가 수행한 "문화산업 정책은 생산 부문과 생산의 정치에 개입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배와 소비의 영역을 다원화하고, 문화시장과 문화 작업에의 접근을 넓히며, 주변화된 사회집단의 창조성을 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공적 개입은 때로 갈등과 논란을 초래했으며, 문화생활이 정치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Peck, 2011).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정책은 여성 인권이나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 타 인종이나 민족의 인권, 청년 및 장애인 권리 운동 등과 같은 '관심의 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들에 바탕을 두고 상향식으로 입안·실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지방정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시장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문화산업 정책에서 이러한 전략은 시장의 상업화 경향에 반대하지만 문화적 필요의 충족/무시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소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작동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문화 생산자 및 소기업의 지원, 소수자와 대안적 참여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즉 시장 메커니즘 그 자체는 문화적 필요를 만족시키거나 지속가능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이를 활용해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지방정부의 정책은 결국 대처정부와의 정치적 투쟁이 심화되면서 좌절되었다. 광역런던의회는 교통, 계획, 주거 부문 등에서 점차 권력을 잃게 되었고, 경제적 개입을 위한 역량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처정부가 1985년 광역런던

의회를 폐지하기 전까지 문화정책은 지방정부 행정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대중적인 도시생활과 문화의 일상적 경험에 뿌리를 둔 형태의 정책을 제공할 수 있었다.

펙(Peck, 2011)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전개되었던 이러한 정책을 그 이후 문화산업의 전개과정,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적 창조경제·창조도시 전략을 비교한다. 그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의 문화산업은 점차 도심재활성화, 상품 다양화, 도시예술 투자 등과 문화생산 또는 문화소비 지구의 지정과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변질했다. 1997년 신노동당의 블레어 행정부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문화산업의 궤적과는 다른 맥락에서 창조산업 정책이 부각되게 되었다. 펙은 과거 사회주의적 지방자치에서 추진되었던 창조도시 정책과 최근 신자유주의적 도시화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화산업(또는 창조산업)의 정책적 배경(또는 정책 생태학)을 <표 3>과 같이 제시했다. 이들 간 비교를 요약하면, 주변화된 사회집단을 선호해 문화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했던 과거 정책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창조도시(또는 창조산업) 정책은 창조성을 정부의 친시장적 개입을 통해 도시성장 전략으로 판매되고 세계시민적 엘리트 생활양식과 결합시키고 있다(Peck, 2011: 64). 이러한 전환의 문제는 단순히 한때 진보적 성향의 정책이 퇴락한 정도가 아니라, 플로리다식 창조성 정책의 유혹과 확산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진정한 창조도시를 위한 사회주의적 지방정부의 정책 모형은 여러 측면에서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창조도시를 위한 사회주의적 지방정부론은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배적이었던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이에 반해 추진되었던 현실적 도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이러한 지방정부의 합리성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정책 교리, 특히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이 만연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탈신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진보적 지방정부의 전략은 문화적 생산과 분

< 표 3 > 창조도시를 위한 정책 생태학 비교

구분	사회주의적 지방정부와 창조도시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창조도시	
재구성된 정책 공간	목적	다양성, 문화의 풍요	성장, 문화를 통한 풍요
	추진력	정치적 시범 프로젝트	경쟁적 경합 기회
	장치(register)	사회주의적 실천	시장 거버넌스
	재구조화	노동(자)을 위해	창조자를 위해
	경제	시장 속에서 시장과 대립	시장 속에서 시장을 위한 보완
	재분배	긍정적, 사회적 정의	부정적, 창조자 우선
	기질(Ethos)	대립	냉정
	정치	대립적	순응적
	주체	주변화된 생산자	문화경제 엘리트
	주장	참여적 개입	합당한 성과
문화적 정치 경제	저작권	활동가-기능 노동자	지원자-기업가
	분석	유물론적-급진적	관념론적-합리적
	장소	지방정부	발전 레짐
	진행자	지방 정치활동가	창조적 성장연대
	기술	분열적	권능적
	가동성	혁신/포부	모방/복제
	추동력	정치적 추동(push)	정치적 견인(pull)
	표현 수단	담대한 실천	최고의 실천
	레퍼토리	실험적-점진적	반복적-재현적
	협조	협력적 학습	경쟁적 목마타기(leapfrog)
확산	느림, 유기적	빠름, 종합적	

출처: Peck, 2011: 53.

배 과정에서 주변화된 노동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즉 플로리다의 창조성 이슈는 '재능'을 창조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도시경제를 위한 경쟁의 근원으로 간주한 반면, 이 대안은 공식 경제의 틈새에서 문화적 노동의 창조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셋째, 사회주의적 지방정부가 추진했던 문화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탈시장적 입장에서 추진되었고, 활동가적 정책입안가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주창적이고, 실천지향적인 방식을 선호했다. 반면 오늘날 창조성 정책들은 시장보완적 개입주의의 형태를

취하며, 권력 구조와 기존의 이해관계를 전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배경 하에서도 '창조도시'라는 같은 이름으로 제시된 2가지 유형의 대조적 정책들은 단순히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적 차이, 예로 관련 정책의 정당성과 개입 방식 등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서 지적될 수 있는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도시를 위한 사회주의적 지방정부 모형은 첫째, 창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창조성에 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과정이나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에서 (문화)노동자들의 창조성이 왜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셋째 어떠한 방식 또는 생활양식을 통해 시민들의 창조성이 고양될 수 있는가, 즉 창조성이 재생산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 4.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위하여

##### 1) 창조적 자기실현과 탈소외된 노동

창조경제·창조도시론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우선 '창조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담론에서 창조성은 도시의 경쟁력 또는 경제의 발전을 위한 원천으로 간주된다. 플로리다는 이러한 창조성의 개념에서 나아가 창조적 결과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집단을 '창조계급'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엘리트주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서, 그는 "인간은 모두 창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서 그는 여전히 창조성을 "경제적 가치 창출의 실질적 원천" 또는 "모든 형태의 인간의 잠재력, 즉 거대한 창고

이자 인간의 창조역량이라는 사실상 무한한 자원"으로 간주한다(이원호 외 역, 2008: 14). 그러나 창조성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측정하고 등가화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성의 경제적 도구화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즉 상품화될 수 없는 창조성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치를 가지는 창조성이 있다. 인간의 창조성은 사회공간적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도록 하며,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결속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창조성은 시민적 정체성과 자존감, 시민의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창조성에 대한 이러한 대안적 개념화를 위해, Edensor et al.(2010)은 토속적, 일상적 창조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들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창조성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인의 선형적인 재능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창출되는 문화적 산물이다. 즉 창조성은 사회적이며, 공동으로 생산되며, 사회공간적 배경 속에 위치지워진다. 창조성은 다양한 장소와 문화적 맥락에서 넓게 분포한다. 창조성은 형식화된 지식이 아니라 일상적 대화 속의 유머나 일상적 생활 속의 즐거운 활동(페스티벌)에 내재되어 있다. 일상생활 속의 '비판적 창조성'(critical creativity)은 개인들이 권력에 저항하면서 자율성을 요구하는 대안적인 일상적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Potts, 2010).

이러한 창조성의 대안적 개념은 플로리다 등이 제시한 창조성의 개념 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창조성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창조성의 재개념화는 사실 상식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성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창조성은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창조성의 (재)생산과 실현과정이 어떻게 왜곡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창조도시에 관한 대안의 모색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론적으로 하비나 르페브르의 이론을 추적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회주의적 지방정부에 의한 창조도시 정

책을 제시한다. 인간의 창조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재)생산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자들의 접근방법을 확장시켜 마르크스의 이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 윌리엄즈(Williams, 1977)에 의하면, '창조적 인간은 마르크스 인간학의 핵심을 이룬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에 인간의 창조력과 자기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강조가 존재한다. 마르크스 이전의 사상가들에 의해 시민사회와 언어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던 자기 창조(self-creation)의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기본적인 노동과정과 깊게 (창조적으로) 변형된 물리적 세계와 스스로에 의해 창출된 인간성의 영역까지 근본적으로 확장된다"(Williams, 1977: 206).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은 유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본질적인 에너지 또는 창조성, 즉 인간의 욕구나 의지 또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에 내재하는 창조성은 단지 '사고하는 자아의 확실성'이 아니라 '노동하는 개인의 물질성'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들은 자연의 사물들에 대한 노동을 매개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여건중, 2004: 82).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있어, 창조적 인간은 무엇보다도 생산하는 인간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즉 인간은 창조성을 가지지만 노동과정을 통한 물질적 생산을 통해 현실화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인간 자신을 (재)생산하고 실현해 나가는 행위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간 노동의 본질은 물질적 생산에 의한 필요의 충족과 더불어 유적 인간으로서 자기실현에 있다. 즉 인간은 노동과정을 통해 현실 세계를 물질적으로 변화시켜나가기만,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도 변화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인간적인 풍요로움을 더 많이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 마르크스(Marx, 1973: 494, 527)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노동의 결과로] 객관적 조건들은 재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 즉 마

을이 도시가 되고, 황무지가 경작지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다. 생산자는 그들 안에 새로운 성질들을 가져오고, 새로운 능력과 생각들, 새로운 관계의 양식들,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언어들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생산자 자신도 변화한다. ... 생산물이 생산되고 다른 종류의 작업 기술들이 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도 생산된다. 역사적 욕구, 사회적 욕구가 필수적인 것으로 설정됨에 따라, 진정한 인간적인 풍요로움이 더욱 많이 성취된다."

여기서 창조성과 관련해 강조될 점은, 진정한 노동은 창조적 자기실현, 즉 자신에게 본질로 주어진 가능성을 이 세계 속에서 실현시켜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마르크스(특히 청년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창조적 자기실현을 추구하며, 인간의 해방은 이러한 자기실현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여건중(2004: 92)은 "이러한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 창조의 풍요로운 공간이 내적 형성의 공간이다. 적극적 자유의 실현의 원천, 능동적 세계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은 문화적 제도를 통해 축적된 인간의 형성과 확장의 역사"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진정한 노동과 창조적 자기실현은 점점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품화된 노동으로 인해 소외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엄청난 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부는 노동하는 인간에게 소외되고 적대적인 힘으로 나타나서 그를 억압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소외란 단순히 그 대상들로부터 주체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소원한 힘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받고 상품화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행위의 결과나 산물(그리고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소원하게 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소외는 항상 자기소외, 즉 자신의 행위를 통한 자신(그의 인간적 가능성)으로부터의 자기 소외를 초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은 생산자의 물질적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위한 창조적 자아실현과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물론 마르크스에 의해서만 제시된 것은 아니다. 현대 소외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루카치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면서, 인간 노동을 상품화시키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마치 사물의 관계인 것처럼 전환시킴으로써 주체성의 상실, 즉 자기 소외를 초래한다(조항구, 1999 등 참조). 이러한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소외는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 현상, 즉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계화 자동화된 생산과정 그리고 거대한 관료조직과 강력한 권위주의 등에 의해 초래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 소외의 만연은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 또는 거대 조직의 일부로 간주되고, 기계나 조직의 요구에 따라 작동하는 수동적이고 불확실한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소외(Entfremdung) 개념은 이러한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며, '고향상실' 또는 '존재망각'이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의 자기소외감을 부각시키고 있다(박찬국, 1995).

오늘날 소외된 노동 또는 인간의 자기소외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 특히 임노동과정에서 발생했든 또는 좀더 포괄적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초래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현상은 인간 존재에 내재한 잠재적 창조성과 진정한 노동과정을 통한 이의 자기실현을 부정한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소외된 노동 나아가 인간 존재의 탈소외화를 위한 노력, 즉 소외된 인간이 스스로 소외되었음을 인식하고 소외로부터 탈피를 위한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를 유발하는 근원으로 사적 소유와 노동 분업의 철폐를 주장한다(최병두, 2010: 6장 참조). 자본주의 경제에서 임노동을 포함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는 근본적으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사적 소유에 기인하며, 또한 효율적 생산을 위해 노동분업은 화폐로 표시되는 교환가치를 통한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제도의 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루카치나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들뿐만 아니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 자신의 실천이 중요하다.

탈소외된 노동과 인간 존재를 위한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탈소외된 개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과정의 탈소외화 문제는 사유재산의 단순한 폐지에 의해서 해결되기 어렵고, 사회생활 전체를 생산자의 직접적 관리(즉 자주관리) 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탈소외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와 관련된다. 즉 소외의 극복은 인간 본성, 즉 진정한 창조성의 회복 또는 창조적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소외란 인간 노동에 의해 생산된 대상들에 대해 그 인간적 기원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즉 물신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따라서 인간 소외의 극복은 이에 대한 인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탈소외된 노동은 인간 주체들 간 관계를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매개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인정 활동을 전제로 한다.

## 2) 일상생활의 재창조적 축제화

이와 같이 문화적 능력으로서 창조성은 인간의 자기 형성 능력을 의미한다. 창조성이란 노동과정(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 즉 praxis)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외부세계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자기 안으로 가져와 스스로를 형성하고 확장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기실현 과정은 물질적 필요의 충족과 더불어 주체들 간의 상호인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로 부각되는 자기실현을 위한 창조성은 작업장에서 물질적 생산을 위한 노동과정과 더불어 일상생활(공간)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함양된다. 즉 작업장에서 노동의 탈소외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그 터전인 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이 자본주의나 산업사회의 논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체험되고 그 자체를 위해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의 일상생활과 그 공간은 자본 축적과 관료 권력의 규정 하에 지배되고 이들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우리는 르페브르(Lefebvre) 등이 제시한 축제의 의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의 주장에 의하면, "일상적 생활과 일상적 공간—도시의 재현적 공간—이 그 자체를 위해 재생되기를, 결정적으로 '체험된 계기'들로 재생되기를 원한다. 체험된 계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상생활을 탈소외화해야 한다. 이러한 계기들은 저항의 집단적, 개인적 예식을 포함한다. ... 이러한 계기들은 '사람들의 화려한 축제'여야 한다"(메리필드, 최병두 역, 2014: 307). 이러한 축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관료주의 지배 질서에 대한 참된 반(反)명제로 부각된다. 나아가 축제는 "사회적 연계를 치밀하게 하고, 동시에 집단적 규율과 일상적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간혀 있던 모든 욕망을 자유롭게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축제는 일상생활과 극단적으로 대비되지만, 다른 한편 "축제는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 ... 축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천천히 누적된 힘의 폭발이라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다를 뿐이다"(Lefebvre, 1991: 202 및 207).

축제는 흔히 넘치게 먹고 마시고, 아무런 질서나 절제 없이 즐거움(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르페브르도 축제일은 '무절제의 날'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절제나 무질서는 기존의 한계나 질서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바흐친(Bakhtin)은 축제 또는 카니발을 어떤 외형적 행사 또는 스펙터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행사로 이해한다. 즉 "카니발은 사람들이 보는 스펙터클이 아니다. 카니발이라는 사고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며,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한다"(홀로웨이 & 닐, 최병두 역, 2014: 144 재인용). 카니발은 단순히 질서의 '전복'이 아니라 모든 계층적 등급, 특권, 차별을 폐지하고, 전정한 창조성, 생성, 변화, 재생의 장치로 이해된다. 바흐친은 이러한 카니발의 의미

를 단순히 술 마시고 떠들거나 방탕한 소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담화나 신체의 개념화 등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알기 쉽게 밝혀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축제 또는 카니발의 개념을 일상생활의 도시적 맥락에도 투사할 수 있다. 도시의 거리는 축제의 무대가 된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시민들의 거리 행동이나 시위는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으며, 창조적 인간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와 이를 억압하는 조건들에 대한 저항의 장이 된다. 르페브르의 이러한 사고는 1968년 프랑스 도시저항운동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으며, 하비(한상연 역, 2012)의 사고에 반영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거리를 점거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외치며 노래하도록 했다. 자본주의 도시 공간이 추상적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성도 자신의 체험된 경험과는 무관하게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의 추상적 재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재창조적 축제화'(recreative festivalization)가 필요하다. 특정 계기로서의 축제에서 나아가 일상생활의 축제화는 이와 같이 억압·왜곡된 인간의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축제의 개념은 창조도시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다. 예로 랜드리는 지역적 창조성에 바탕을 둔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의 선전 활동으로서 축제에 대해서는 경계하고자 한다. 즉 "지역적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축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관광을 통한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임상오 역, 2005: 62). 좀 더 구체적으로, Durmaz et al(2008)은 창조도시의 주요 요소를 3가지, 즉 창조성 전략, 창조산업, 창조적 공동체로 구분하고, 축제는 이러한 3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는 매우 특이한 사회적, 예술적 활동 형태라고 주장한다. 즉 축제는 시민들의 창조성을 함양하며,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창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고양시킴으로써 창조적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축제의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도시 내 창조지구나 창조클러스터의 구성과 같은 도구적 활용 이상의 어떤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축제화에 관한 주장은 창조도시 이론과 축제 연구 간의 관계를 고찰한 Zherdev(2014)에 반영된다. 그에 의하면, 창조도시론에서 플로리다는 새로운 창조적 인재들의 유치를 위해서 개방성과 다양성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그는 도시공간의 축제화가 창조도시 패러다임 내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축제는 도시 정체성과 창조성을 함양하며, 국지적 문화 활동의 촉진을 통해 창조적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축제는 모든 도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이며, 문화예술적 측면(도시 정체성의 함양)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창조산업의 발전), 사회적 측면(창조적 공동체) 등에 기여한다. 따라서 도시공간을 향상적인 축제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축제화 과정은 창조도시 패러다임 내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축제화는 정기적인 대규모 행사(이벤트)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를 통해 지속적인 축제 경험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창조산업이나 창조도시의 개념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이나 기업주의적 도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처럼, 현대 도시에서 축제가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소마케팅이나 기업편향적인 도시 이미지의 재구성과 관련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거나 왜곡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과 같이 도시공간에서 축제의 향상적 출현은 도시 문화의 부활과 도시인들의 정체성 함양을 명분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시 문화와 창조성을 시장화, 상품화시킨다고 비판된다. 즉 현대 도시에서 미술전시회, 음악회, 영화제, 체육경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촉진되는 축제는 기획된 대규모 문화행사로 전략해, 지역주민

들의 정체성이나 창조성을 함양하기보다는 문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함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투자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최병두, 2012: 제7장 참조). 따라서 도시(공간)의 축제화는 단순히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나아가 도시의 일상생활을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은 생산에 필요한 임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노동과정에 필요한 생산수단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생활수단들도 상품화되고 자본축적 과정에 포섭되어 있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 개념이 명시한 바와 같이, 도시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도시인들의 창조성을 재활성화하고 나아가 자기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질서화된 영역이 되었다. 축제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창조성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축제의 의미는 르페브르의 축제의 개념 및 들뢰즈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을 원용해 재해석될 수 있다(Johansson and Kociatkiewicz, 2011). 즉 축제는 기존의 질서와 행태에서 벗어나기, 친숙한 규칙과 준거를 탈맥락화하기, 일상적 공간 실천에 체현된 당연적 해석을 의문시하기 등을 통해 낡은 도시공간을 탈영토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동시에 축제는 새로운 의식과 행동양식을 창출하기, 새로운 사회공간적 상호관계 맺기, 이러한 일상적 실천으로 새로운 생활공간 편성하기 등을 통해 창조적 도시공간을 재영토화할 수 있도록 한다.

## 5. 결론

창조경제·창조도시 이론이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실질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을 끌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개념이 나름대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인간의 창조성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창조도시의 조건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창조도시의 조성을 통해 창조적 인력을 배양 또는 유치해야만 창조산업 나아가 창조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은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최근 발달하고 있는 이른바 '신경제'(포스트포드주의, 유연적 축적체제, 지식기반경제 등으로 불리는)를 촉진하는 한편, 이를 주도하는 새로운 지식인 집단, 즉 플로리다가 지칭한 '창조계급'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창조도시 이론이나 정책은 경험적으로 많은 문제들, 예로 경제적 공간적 불균등발전과 양극화, 주거문제와 생태파괴, 개인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적 논평가들 뿐 아니라 이론의 주창자들까지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주창자들 특히 플로리다가 제시한 문제 해결방안은 '창조성'을 재강조하는 동의반복적 또는 자기모순적 해법이라고 평가된다. 국내외의 많은 논평가들은 이론이 내재한 문제나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기존의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상당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안적 개념들도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이러한 창조성이 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창조성은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창조성이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잠재적 능력이며, 노동과정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성의 실현 과정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을 함양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창조성은 소외된 노동으로 인해 억압되고 실현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상품화된 노동(즉 임노동)은 노동자로 하여금 생산물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이 적대적 힘을 가지고 노동자를 억압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 또는 산업 사회 전반에서 만연한 소외된 노동은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이 자신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소외된 힘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창조성이 실현되고 (재)함양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러한 상황을 탈출해서, 인간의 본질로서 잠재된 창조성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의 탈소외화와 도시공간의 축제화가 요구된다. 노동의 탈소외화는 임노동관계, 사적 소유제, 노동의 분업 등의 단순한 제도적 폐지에 의해 해결될 수 없고, 생산물에 대한 자주적 관리, 그리고 소외된 사회적 관계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인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소외된 노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간의 '재창조적 축제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공간의 축제화는 기존에 질서 잡힌 일상생활의 반복성을 교란시키고, 지배적 수단과 제도들을 전복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창조성을 재충전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회공간적 관계와 창조적 생활양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원고접수일: 2014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

최종원고접수일: 2014년 12월 26일

## ❖ Abstract

Alternatives to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towards dealienated 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s

Choi, Byung-Du

This paper considers both som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r problems of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discusses suggestions of theoretical advocates and critical commentator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purposes dealienated 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s as new alternatives for realization of human creativity. A reason why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world-widely seems that it has its own normative aspects, that is, emphasizing human creativity, considering some conditions for creative city, and giving priority to creativity and creative city over growth of (creative) economy. But the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or creative city may result in serious urban problems, including socio-spatial inequality, urban housing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anxiety. Even though Florida has admitted these problems, he suggests a self-contradictive method to solve them. Other many critical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several types of alternativ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eories of social economy, of urban environment, of public politics and of socialist local government. These alternatives give some important insights to get rid of limitations of creative economy and/or creative city theory and policy, they seem not to overcome entirely them. This paper suggests a new alternative, reconceptualizing creativity as a human potential ability to realize it through production process with labour, and proposing dealienation of 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ization of everyday life in order to recover the disappeared or distorted human creativity in capitalist society.

Keywords: creative economy, creative dity, alternative creativity, dealienated labour, recreative festivals

## 참고문헌

- 김기곤. 2010.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10(2), 49~90쪽.
- \_\_\_\_\_. 2011. 「문화-창조-인권도시의 관계와 정책방향」. 《광주연구》, 2011년 1호, 94~113쪽.
- 김용창. 2011.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상」. 《공간과 사회》, 35, 105~150쪽.
- 김재구. 2014. 「사회적 창조경제의 프론티어, 사회적 기업」. 『한국취업진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혜민. 201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정책에 관한 연구-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방행정정책연구》, 1(2), 25~54쪽.
- 랜드리(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Comedia, London.
- 매리필드(최병두 역). 2014. 「앙리 르페브르: 공간에 관한 사회주의자」. 크랭 & 스티프트 편.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로; Holloway, J. and Kneale, J. 2000. "Mikhail Bakhtin: dialogics of space." in Crang, M. and Thrift, N. (eds). *Thinking Space*. Routledge.
- 박찬국. 1995. 「인간 소외의 극복에 대한 하이데거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 고찰」. 《철학연구》, 36(1), 153~176쪽.
- 사사키(정원창 역). 2004. 『창조하는 도시: 사람, 문화, 산업의 미래. 소화; 佐佐木雅辛. 2001. 『創造都市への挑戦-産業と文化の息づく街へ』. 岩波書店.
- 손대권. 2012. 「창조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진화방향」. 《창조와 혁신》, 5(2), 115~144쪽.
- 송은하. 2012. 「대안도시 이론과 도시 평가모형의 한계」. 《도시연구: 역사, 도시, 문화》, 8, 73~121쪽.
- 심광현. 2012. 「산업도시-창조도시 비판과 생태문화도시의 대안적 도시발전 모형」. 《도시인문학연구》, 4(2), 31~69쪽.
- 여건중. 2004. 「문화적 마르크스-창조적 인간, 자기 실현, 자유」. 《영어영문학》, 50(1), 79~94쪽.
- 이상호. 2013. 「창조경제 시대의 협동조합」. 《경남발전》, 128, 44~51쪽.
- 이용숙 최정인. 2012. 「싱가포르의 창조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공간과 사회》, 22(2), 5~37쪽.
- 이태수. 2009.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한계」. 《창조와 혁신》, 2(2), 255~293쪽.
- 정성훈. 2012.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1),

386~408쪽.

- 조성철·임업. 2009. 『창조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367~384쪽.
- 조항구. 1999. 『루카치와 마르크스 소외론』. 《철학연구》, 70, 79~94쪽.
- 최병두. 2010.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 \_\_\_\_\_.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 \_\_\_\_\_. 2013.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 개념적 논제들과 비판』. 《공간과 사회》, 45, 90~130쪽.
- 플로리다(이길태 역, 개정판). 2011. 『신창조계급』. 북 콘서트; Florida, R. 2000.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New York(번역 초판은 이길태 역. 2002.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 플로리다(이원호·이종호·서민철 역). 2008.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London.
- 하비(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Harvey, D. 2012. *Rebel Cities*. Verso.
- 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모델에 의거한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플로리다, 사사키, 랜드리 의 논의를 중심으로』. 《ECO》, 12(2), 185~206쪽.
- 한세억. 2011. 『사회공공성 모델에 근거한 창조도시담론의 비판적 성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 378~397쪽.
- 홀로웨이 & 닐(최병두 역). 2014. 『미하일 바흐친: 공간의 대화 이론』. 크랭 & 스프리트 편.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로; Holloway, J. and Kneale, J. 2000. "Mikhail Bakhtin: dialogics of space." in Crang, M. and Thrift, N.(eds). *Thinking Space*. Routledge.
- Atkinson, R. and Easthope, H. 2009. "The consequences of the creative class: the pursuit of creativity strategies in Australia's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3(1), pp. 64~79.
- Bain, A. L. 2013. *Creative Margins: Cultural Production in Canadian Suburbs*. Univ. of Toronto Press.
- Boren, T. and Young, C. 2012. "Getting creative with the 'creative city'? Towards new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urba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5), pp. 1799~1815.
- Donegan, M. and Lowe, N. 2008. "Inequality in the creative city: is there still a place for 'old-fashioned' institution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2(1), pp. 46~62.
- Durmaz, B., Yigitcanlar, T. and Velibeyouglu, K. 2008. "Creative cities and the film industry: Antalya's transition to a Eurasian film centre." *The Open Urban Studies Journal*, 1, pp. 1~10.

- Edensor, T. 2010. *Spaces of vernacular creativity: rethinking the cultural economy*. Routledge, New York
- Johansson, M. and Kociatkiewicz, J. 2011. "City festivals: Creativity and control in staged urban experienc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8, pp. 392~405.
- Krätke, S. 2010. "'Creative cities' and the rise of the dealer class: a critique of Richard Florida's approach to urba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4), pp. 835~853.
- Krueger, R. and Buckingham, S. 2012. "Towards a 'consensual' urban politics? Creative planning, urban sustainability and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3), pp. 486~503.
- Lefebvre, H. 1991. *Critique of Everyday Life* - vol. one, London: Verso.
- Marx, K. 1973.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intage Books.
- Novy, J. & Colomb, C. 2013. "Struggling for the right to the (creative) city in Berlin and Hamburg. New urban social movements, new 'spaces of h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5), pp. 1816~1838.
- Peck, J. 2005.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pp. 740~770.
- \_\_\_\_\_. 2011. "Creative moments, working culture, through municipal socialism and neo-liberal urbanism." in MaCann E.J. and Ward, K.(eds), *Mobile Urbanism: Cities and Policymaking in the Global Age*, Univ. of Minnesota, Minneapolis, pp. 41~70.
- Potts, T. 2010. "Creative destruction and critical creativity. Recent episodes in the social life of gnomes." in T. Edensor, D. Leslie, S. Millington & N. Rantisi (eds.), *Spaces of Vernacular Creativity. Rethinking the cultural economy*, Routledge: London, pp. 155~169.
- Pratt, A. 2008. "Creative cities: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reative class." *Geografiska Annaler: B—Human Geography*, 90(2), pp. 107~117.
- \_\_\_\_\_. 2011.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the creative city." *City, Culture and Society*, 2(3), pp. 123~130.
- Roberts, D. 2012. "From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to the creative economy: reflections on the new spirit of art and capitalism." *Thesis Eleven*, 110(1), pp. 83~97.
- Scott, A. 2006. "Creative citi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questions." *Journal of Urban Affairs*, 28(1), pp. 1~17.
- UNDP and UNCTAD. 2010. *Creative Economy: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 (번역, 2013. UNCTAD 창조경제보고서).

- Vanolo, A. 2012. "Alternative capitalism and creative economy: the case of Christi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5), pp. 1785~1798.
- Vivant, E. 2013. "Creatives in the city: urban contradictions of the creative city." *City, Culture and Society*, 4, pp. 57~63.
- Waitt, G. 2009. "Creative small cities: rethinking the creative economy in place." *Urban Studies*, 46(5&6), pp. 1223~1246.
-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U.P.
- Zherdev, N. 2014. "Festivalization as a creative city strategy." *Working Paper, Internet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pen Univ. of Catalonia.